

이슈브리프 통권178호
(2020. 3.30)

도쿄 올림픽 개최 연기와 파급영향

제178호

김숙현 대외전략연구실



도쿄 올림픽 개최 연기와 파급영향

김숙현 (대외전략연구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은 결국 도쿄 올림픽 1년 연기라는 초유의 결과를 낳았다. 아베 총리와 IOC 바흐 위원장은 3월 24일 전화통화를 갖고 올림픽을 내년 7월 이전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미국 등에도 확산되었으므로 7월 24일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의 연기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기 시작한 2월부터 무관중 올림픽이 거론되었다. 3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올림픽 무관중 경기는 볼 수가 없다. 도쿄올림픽, 1년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올림픽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으며 G7 정상들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올림픽 개최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3월 23일 캐나다와 호주가 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일본 정부도 도쿄 올림픽 정시 개최를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도쿄 올림픽 1년 연기로 올림픽을 준비했던 스포츠인들뿐 아니라 아베 정부와 일본경제에도 적지 않은 피해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쿄 올림픽 연기에 따른 일본 내 예상 피해를 살펴보고 올림픽 후 총선을 검토하고 있었던 아베 정부의 정치일정 변화, 그리고 이것이 미칠 일본 국내정치에의 영향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일관계를 포함한 향후 일본의 대내외 과제에 대해 고찰한다.

도쿄 올림픽 연기에 따른 피해 규모와 파장

NHK는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6천 400억 엔(약 7조 3천억 원) 정도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도쿄 올림픽 관객 소비지출, 경기장 유지비용, 선수촌 유지 및 관리비, 각 경기단체 예선전 재개최 경비 등을 합산 추정한 것이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가 공개한

올림픽 개최 관련 총 비용은 1조 3천 500억 엔(약 14조 원)으로, 이미 경기장, 선수촌, 각종 편의시설 등의 건립과 관련해서 8조 원을 사용했다. 또한 소비규모 축소, 관광산업 위축 등으로 2조 7천억 원의 손실이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의 경제적 손실 예상액이 5천 151억 엔(약 53조 원)이기 때문에 올림픽이 취소되지 않고 연기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소비세 인상으로 이미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림픽 1년 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은 그야말로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몇 가지 피해 사례를 살펴보자면, 도쿄 패럴림픽 직후부터 입주자를 받을 예정이었던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이미 4년 전에 분양되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입주가 이루어지면 선수촌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1만 1천 명에 달하는 선수단 및 자원봉사자들의 숙소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 이미 완공된 올림픽 경기장과 각종 시설들의 유지와 보수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이 취한 입국제한 조치로 각 종목 대륙별 올림픽 예선전들이 취소되었고, 올림픽 참가 선수 1만 1천명 가운데 43%가 현재까지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들은 올림픽 연기로 예선전을 다시 치를 기회와 시간을 확보했으나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57%의 선수들은 다시 예선전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지도 모른다.

아베 총리 정치일정도 차질 불가피

도쿄 올림픽 연기는 아베 총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주요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번 도쿄 올림픽을 ‘안심되고 안전한’ 올림픽으로 치르겠다고 공언해왔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방사능 관련 우려를 종식시키고 후쿠시마의 악몽에서 벗어나고자하였다. 2012년 취임 이후 아베 총리는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를 시행하여 취업률이 상승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도쿄 올림픽 개최에 따른 수익이 최대 59억 달러(약 7조 4천억 원)까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경제 부흥의 모멘텀을 마련할 기회를 맞았던 것이다.

작년 말부터 아베 총리의 국내적 입지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벚꽃 모임’ 스캔들과 아베의 사학재단 개입과 관련된 전직 관료의 자살 등으로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도 40%대에 머물러 있어 돌파구가 절실하였다. 이에 아베 총리는 도쿄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고 여파를 몰아 하반기에 재신임을 묻는 총선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아베 총리로서는 본인이 총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올림픽을 개최하고 그 업적을 총리로서의 신임을 다시 얻는 카드로 이용하고 싶었을 것이다.

내년 9월은 아베 총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다. 이미 당규를 고쳐 3연임을 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임기 동안의 화려했던 행보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리 취임 직후 해결 우선과제로 삼았던 ‘납치자 문제’는 진전이 없고, 러일 간 영토문제도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강제징용문제, 수출규제 등 한국과의 관계도 풀리지 않고 있고, 4월 국민방문 예정이었던 시진핑 주석도 코로나19로 방일을 취소하여 아베 총리의 장기라는 외교 분야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도쿄 올림픽 개최는 아베 총리가 국민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총선, 나아가 헌법 개정의 발판을 만들고 싶었던 아베 총리의 계획은 도쿄 올림픽 1년 연기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아베 정부의 향후과제

아베 총리로서는 올림픽 1년 연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현재 일본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과 우려는 코로나19에 대한 일본 정부의 미숙하고 성의 없는 대응이다. 도쿄 올림픽 개최에 차질이 있을까봐 코로나 감염검사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확진자의 동선도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일본과 함께 세계적 고령화 국가 중 하나이며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는 일본 정부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일본 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아직 일본은 대규모 확산단계가 시작되지 않았고

앞으로 대규모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일부 관료들은 확진자 검사를 많이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유전자 증폭(PCR) 검사 장비가 부족하고 여타 의료장비와 병상의 확보도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은 PCR검사 키트를 충분히 보유하고 유통시켰기 때문이다. 그만큼 대응이 빨랐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유럽의 당국자들도 우리 정부에게 코로나19 진단 시약을 요청하고 있고 드라이브 스루 등 검사방법 전수에 대한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진단시약이 부족하면 한국 정부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외교적 갈등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일 간 협력이 현재의 갈등국면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일본만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9년 전 있었던 동일본대지진의 초동대응 실패는 민주당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다. 지금의 일본 정부도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국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가의 임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